

08

버려야 할 관행, 지켜야 할 원칙

뉴스 기사는 저널리즘의 현실을 스스로 말한다. 시민의 신뢰가 추락하는데도 기사의 품질이 제자리걸음 하는 이면에는 잘못된 취재 보도 관행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시급히 바꿔어야 할 대표적 관행을 짚어보고 올바른 보도 원칙을 제시한다. 이 기획은 저널리즘 품질 향상을 고민하는 '좋은저널리즘연구회' 회원들이 돌아가며 집필한다.

직접 인용 제목의 폐해

정치권 막말 발언의 불쏘시개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목에 반영하는 ‘인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큰따옴표를 사용하는 제목이 객관적이라는 뜻이다.

종합일간지 1면을 잠식하는 직접 인용 제목

큰따옴표(“”): 인용문에 주로 사용되며 시각적 작용으로 독자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문장상으로도 크게 어필한다.

위의 글은 한국편집기자협회가 2011년 발간한 『세상 편집하라: 신문편집의 이론과 실제』라는 단행본에서 신문 제목에 큰따옴표가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를 설명한 대목이다. 큰따옴표는 남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직접 인용했음을 의미하는 문장 기호다. 신문 편집의 교과서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 책은 큰따옴표를 편집기자들이 제목에 즐겨 사용하는 대표적 기호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또 신문 제목의 유형을 크게 ‘객관 제목’과 ‘주관 제목’으로 나누면서, 객관 제목은 또다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단순 요약형’과 기사의 특정 부분을 거의 그대로 제

지난 기획연재 6편에서 선진 언론에서는 금기시되는 직접 인용 제목이 국내 신문에서는 너무 당연시되고 널리 사용되는 문제점을 다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위에 소개한 책에 잘 나와 있다. 신문에서 제목을 책임지고 있는 편집기자들이 직접 인용 제목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객관적이고 호소력 있는 유용한 편집문법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다. 기사 제목은 언론의 취재 보도 활동의 총체적 결과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는 표지다. 별도의 전문성을 가진 편집기자에게 제목을 맡기는 자체가 그 특별한 중요성을 상징한다. 그런 점에서 직접 인용 제목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지난 5월 한 달간 국내 6개 종합일간지(경향, 국민, 동아, 조선, 한겨레, 한국) 1면 메

“

한국 기자들은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할 때 조금씩 수정하거나 심한

경우 전혀 다르게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충 비슷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심리다. 취재원들이 기자와의 대화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도 자기 발언이

어떻게 각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인 제목에 대해 간략한 내용 분석을 해봤다. 분석 대상 468건의 기사 가운데 제목에 직접 인용이 들어간 기사는 164건이었다. 이들 기사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현상은 대통령이나 정치인, 관료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제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발화자+발언 또는 발언 자체만으로 이뤄진 제목(예: <“文 대통령 국정-사법농단 청산 뒤 협치”>, 동아일보 5월 3일자)이 10건 가운데 7건이 넘었다. 발화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1.9%로 가장 많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19.1%), 정부 관료나 정부(18.2%), 정치인이나 정당(10%) 순이다. 이들 통계는 한국 신문 1면의 메인 제목들이 취재원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받아쓰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와 분석, 사실 검증 없이 단순히 취재원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보도 행태는 저널리즘의 기본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설사 기사에는 객관적인 평가와 심층적 분석이 충분히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제목이 그렇지 못하다면 의미 없는 일이다. 부

제목이나 소제목이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제목이 주는 강력한 효과를 생각하면 다분히 제한적이다. 서구 언론이 직접 인용 제목을 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문을 무시하는 제목 달기로 과장·왜곡되는 기사들

인용형 제목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제목이 기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사 원문에 적시된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제목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원문에 없는 내용도 인용 표시를 한다. 예를 들어 5월 29일자 한국일보 1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인터뷰 기사의 제목은 <“한국당은 원팀… 박근혜 기획사면해도 총선 문제 없다”>라고 달았지만 기사 원문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 직전 사면된다 해도 당이 혼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였다. “당이 혼들리는 일은 없다”는 발언을 의미와 맥락이 다른 “총선 문제 없다”로 둔갑시켰다. 제목을 단 기자는 그 말이 그 말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원문 내용을 정확히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인용(quotation)의 명제는 저널리즘 원칙에 앞서 상식에 가깝다. 뉴욕타임스 내부 가이드라인은 인용한 내용을 “다듬지 않는다(clean up)”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거의 비슷한(approximate quotations)’ 인용도 독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한국 기자들은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할 때 조금씩 수정하거나 심한 경우 전혀 다르게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충 비슷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심리다. 취재원들이 기자와의 대화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도 자기 발언이 어떻게 각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반박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5월 16일 기자회견을 다룬 각 신문 기사를 비교하면 같은 발언을 인용하는데도 그 내용은 서로 아주 달랐다. 일차적으로 기사 단계에서 부정확하게 인용된 내용을 제목에서 또다시 변형할 경우 기사의 왜곡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사 원문에도 없는 내용을 인위적으로 제목으로 뽑는 관행이다. 이번 분석에서 이러한 유형의 제목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전체 기사의 21.9%인 36건에 달했다. 예를 들어 5월 24일자 경향신문은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주미대사관 관계자가 애당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주미대사관 직원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들려봤다”>라고 제목을 달았다. 정식 발표가 아니라 여권 고위관계자를 취재원으로 적시한 이 기사 어디에도 제목 같은 발언은 없었다. ‘조사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라는 뜻에 가깝다. 이렇게

기사 원문에 없는 내용을 제목에 굳이 반영하는 행태는 기자들이 큰따옴표를 단순히 강조의 의미 정도로 혼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경찰관의 활약상을 다룬 5월 25일자 동아일보 기사의 제목 <“마야여성 딱 걸렸다”>, 형가리 유람선 사고를 다룬 5월 31일자 한국일보 기사의 제목 <“제발” 다뉴브강에는 절규가 흘렀다>가 그런 예다.

기사 원문을 무시하는 제목달기 관행은 과장과 왜곡, 편향된 보도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예를 들어 5월 8일자 조선일보의 <“200조 원 쓴 탈원전 값비싼 실패” 독일의 후회> 제목은 기사 이곳 저곳에 나온 내용을 조합해서 만든 인용구이다. 독일 슈피겔지의 보도를 소개한 이 기사는 원문 자체를 본래 의미와 다르게 인용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마치 해당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인용 처리하는 제목도 마찬가지다. 5월 9



일자 국민일보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목동의 집 한 채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 했다. 이 기사의 제목은 <“김학의 목동 집 한 채 요구”>라고 달았지만, 기사에는 윤중천 씨의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 유사한 경우로 한겨레는 5월 14일 기사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라며 <“고 장자연 문건 사실일 가능성 있다”>고 제목을 달았지만 기사에는 이런 발언이 없을 뿐 아니라 취재원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제목만 보는 독자라면 두 기사 모두 윤중천 씨가 직접 한 발언이나 검찰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쓴 기사로 착각하기 쉽다.

편향적 결과를 불러오는 인용형 제목의 폐해

인용형 제목은 필연적으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많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누군가의 말이나 글을 일방적으로 크게 부각함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배제하는 편향적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서로 다른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기사라면 공정성 훼손 위험은 더욱 크다. 예를 들어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맞서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5월 4일자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전혀 상반된 제목을 달았다. 한겨레는 전날 열린 수원고검 개청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한 발언을 토대로 <박상기 검찰이기주의 경고 … “수사권 재조정해야”>라는 전단 제목으로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과 전화통화가 이뤄졌다며 <“경찰에 과도한 권한 … 수사권 조정 이대론 안 된다”>는 제목을 달았다. 기사 중에는 박 장관의 발언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검찰, 검손해야”>라는 소제목으로 다뤘다. 반면 한겨레는 기사 마지막 부분에 문무일 총장이 한 언론과 통화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했지만 제목으로는 다루지 않았다.

인용형 제목의 폐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는 정치 기사이다. 정책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는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폭로, 비방, 말싸움이 지배하는 한국의 정치풍토는 언론의 인용형 제목에 안성맞춤이다.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양쪽 주장을 따옴표에 넣어 그대로 옮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춘식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1992~2012년 사이 대통령 선거 기간 3대 지상파방송의 저녁 뉴스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인용형 제목 사용이 갈수록 크게 증가했다. 1997년 선거까지는 제목에 인용부호가 등장한 뉴스가 10% 미만에 불과했지만, 2002년 선거에서는 약 30%로 늘었고, 2012년 선거에서는 81.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은 큰따옴표를 사용한 직접 인용 제목이었다. 근래에 정치권에서 연일 계속되는 막말 발언들은 일정 부분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정치 기사의 주요 관심사가 정당이나 정치인 사이 대립과 갈등이고, 언어가 그 도구가 되는 언론 환경에서 정치인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려고 하기 마련이다.

앞에 소개한 책 《세상을 편집하라》는 큰따옴표를 제목에 사용하는 데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면책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사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저널리즘 원칙에서 이탈한 직접 인용 제목이 점차 정상적 관행으로 당당히 자리 잡는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급해보인다. ♣